



광남일보



장성, 연중 소규모 마을축제로 매력 발산
4~10월 산토리 유채꽃축제 등 10개 운영

8



신우철 안도군수, 국제사회에 해양치유 소개
스페인서 슬로시티 연맹 303개 도시 대상

10



전남도청 우수 장민규, 생애 첫 '태극마크'
투로 태극권전능 국가대표 선발

12



"효령타운서 품격있는 노후 동행을"
광주시, 개원 15주년 기념·유공자 포상

14

주간 제781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음력3월5일)



국민주권전국회의의 광주전남본부는 1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과 마은혁 즉각 임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현재, 소추 111일만에 선고 지정...생중계·방청 허용
인용하면 6월초 '조기대선'...기각·각하땀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현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 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4·5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동안 속의를 거쳤다. 역대 최장 속의 기간이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이나 각하 땀 윤 대통령이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진영 대결까지 극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

이 될 전망이다.
현재의 속의 과정이 길어진 것은 비상계엄과 포고령 1호의 위헌적 요소, 국회장 및 의결 방해 시도, 정치적 체포 지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이 이뤄지면 이날부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고, 경호 단계도 낮아진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

가 안 된다는 결론이다.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탄핵심판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8명의 재판관들은 최종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탄핵심판 결과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탄핵 여부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이 투표하는 평결은 3일 오후 늦게나 4일 선고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관 개인의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현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

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데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재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왔고 있다"며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4일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오늘 전남 4곳서 재보궐 선거

담양군수·기초의원 3명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1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전남에서는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다 선거구·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출마했다.
기초의원 선거는 광양과 고흥, 담양 지역에서 치러진다.
광양시 다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문건 후보와 진보당 임기주 후보, 자유통합당 박종열 후보가 맞붙는다.
고흥군 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후보와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출마했으며, 담양군 라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노대현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치러진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은 25.8%였다.
담양 군수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 4만394명 중 1만5316명이 투표에 마쳐 37.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소에 갈 땐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을 실행한 원본 화면만 인정된다. 캡처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무효다.
지정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내 투표소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선정 장기근무 계약 의사에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 등 지원

전남도 등 전국 4개 광역자치체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남도를 비롯해 강원·경남·제주 등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지로 선택됐다.
올해 7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였다.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96명은 정부로부터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주거 등 정주여건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3억5200만원이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강원 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삼성창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목포시의료원·성가톨릭병원·순천의료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한라병원·한국병원·중앙병원·한마음병원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내·업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미래차 삼각벨트 완성

자율차 부품 개발/생산
전국 일민산업단지

자율차 부품 인출/평가
및그린 국가산업단지

220만평
삼각벨트

자율차 실증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광주,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의 중심 이됩니다!